

트럼프發 관세전쟁: 전개 양상과 최종 지향점

전민수 수석연구원, 경제정책연구센터 (minsu.jun@posri.re.kr)

목차

1. 트럼프 2기 관세 초기 양상
2. 트럼프 관세: MAGA 실현 위한 ‘주치료제’ 겸 ‘보강제’
 - 1) 트럼프가 가진 문제의식과 목표
 - 2) 트럼프 관세 이행 전략
3. 트럼프 관세정책 방향성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있으나, 방향 및 최종 목표가 여전히 불투명 → 향방의 조망을 위해 트럼프의 진의 파악이 필요
-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처 의장, “기축통화 발행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트럼프식 공정’이자, 트럼프가 생각하는 美 제조업 부활의 필요 조건”
 - 트럼프, 기축통화가 가진 근본적 한계(달러의 비탄력적 수요)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 및 수출경쟁력 상실을 미국 제조업 붕괴의 원인으로 인식
 -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은 유지하되, 주요국이 그동안 누렸던 기축통화의 혜택을 회수하는 것부터 MAGA(제조업 부활)의 실현이 시작된다고 생각
- 트럼프에게 관세는 MAGA 실현을 위한 직접적 솔루션인 동시에 다른 정책 도구의 활용을 지원하는 ‘보강제’
 - Miran 의장, ‘관세(무역적자 개선) + 통화 조정(강달러 관리) 조합’을 트럼프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무역체제 재편 전략으로 제안
 - 관세는 그 자체로 핵심 도구이자, 통화 조정 및 안보 비용의 조정(기축통화 혜택 회수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상대국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
- 향후 트럼프 관세 이행의 핵심 키워드: ▲ 점진성 ▲ 차별성 ▲ 복합성
 - 1기에서 효용(위협감은 극대화, 충격은 최소화)을 확인한 점진적 이행 방식은 트럼프 관세 전선(戰線) 전체에서 입체적으로 적용될 것
 - 트럼프의 복합적 의도(통상/非통상 포괄)에 각국이 호응하는 수준에 따라 관세는 차별적으로 부과, 상호관세는 중심 체계로 활용될 것
 - 高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은 트럼프 관세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의 동력을 결정
- 美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한 보호무역 확산은 이제 정권과 무관한 구조적 변화이므로 시장-공급망 측면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
 - 트럼프 2기 美-中 관계 설정은 韓-美 협상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시장-공급망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 미국 활용 전략을 수립, 미국의 관세/방위비/통화조정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1. 트럼프 2기 관세 초기 양상

□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였으나, 정책 방향 및 최종 목표가 여전히 불투명

- 트럼프 2기 초기 관세는 대통령의 독자 권한을 최대한 활용,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트럼프 2기 초반, 매주 1~2건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전개, 경제/산업 정책은 사실상 관세에 'All-In'
 - 관세 조치의 급진적 추진은 IEPPA¹(캐나다·멕시코·중국), 기존 행정명령의 취소²(철강·알루미늄)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독자 권한의 활용 극대화로 가능
 - 그러나, 對캐나다·멕시코 관세는 가장 먼저 공표된 조치임에도 USMCA 적용 품목은 여전히 유예하였고, 상호관세는 세부 절차 및 일정이 미정
→ 트럼프 관세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최종 목표가 아직 불분명

【 현재까지 발표된 트럼프 관세 주요 조치 】

공표일	관세 조치	정식 발효 예정
1.20. (취임일)	기존 정책 재검토, 'American First' 외교 방안 수립 지시	4.1.부처별 종합보고 예정
2.3./ 3.4	캐나다·멕시코 25% (칼륨 및 캐나다産 에너지 10%)	4.2.까지 USMCA 품목 유예
	중국 추가관세 10% + 10%	2.4.부터 발효
2.11.	철강·알루미늄 25%	3.12.부터 발효
2.13.	상호 관세 방안 수립 지시	4월 국별 실태조사 착수
2.25.	구리 232조 적용 사전조사 지시 목재 232조 적용 사전조사 지시	270일 이내 조사 완료 예정

자료: POSRI 정리

- 非통상 목적을 위한 도구로써 '관세' 활용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은 트럼프 1기 대비 '차별점'

¹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긴급경제권한법

² 2.11일에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는 트럼프 1기 '232조' 적용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거쳐, '18.3월에 발표된 포고령의 사후 예외조치들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대통령 독자 결정 가능

- 對中 관세, 철강 232조 적용 등 트럼프 1기 주요 관세 조치들은 해당 국가 혹은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집중
 - 반면, 트럼프 2기初 관세 정책은 이민 제한, 국경 통제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짐
 - 1.26일, 콜롬비아에 추방 이민자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50% 관세’를 언급한 것이 트럼프 2기 관세 활용의 시작
 - 對캐나다/멕시코 관세 명분은 국경통제/불법마약 관련 비상사태였으며, 對中 관세 역시 불법 마약의 유입 통제가 명분
 - ‘급진적 관세 확대’가 가진 한계점에 대한 대비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표를 강행 → 그 결과,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폭
 - 트럼프式 급진적·일방적 관세가 가진 한계점은 이미 장기간 문제제기 되어 왔으나, 트럼프 측은 ‘장기적으로 혜택이 더욱 크다’는 주장만 반복
 - NYT는 트럼프는 ‘관세’를 포함한 기존 국제질서 변화 시도에 공식적인 선언도, 근거를 포함한 설득도 생략하였다고 비판(3.11.)
- 【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한계점 】
- ✓ **보복관세 여파:** 주요국 보복 대응 방안 旣마련 → **소비자 부담 가중**
 - ✓ **공급망 경로 의존성:** 공급망 변경 시간/투자 소요 → **기업 부담 가중**
 - ✓ **제도적 한계:** ‘비상사태’ 남발은 의회 반발 초래 → **정치적 부담 가중**
 - ✓ **3선 불가:** 트럼프 이후 정책 연속성 의구심 → **정책 불안정성 가중**
- 중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을 시작했으며 캐나다, 멕시코 이외 아직 관세 조치를 공표하지 않은 EU도 보복관세를 예고 → 한계점들이 점차 현실화
 - 트럼프 2기 출범 후 고작 2개월여 경과하였으나 극도로 혼란한 상황, 이에 관세 관련 향후 방향성 조망을 위해 트럼프가 가진 진의 및 관세 활용 복안에 대한 파악이 긴요

2. 트럼프 관세: MAGA 실현 위한 ‘주치료제’ 겸 ‘보강제’

□ 트럼프의 경제 ‘책사’인 Stephen Miran은 트럼프가 관세를 고집하는 이유와 관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명

○ 트럼프, Hudson Bay Capital의 투자전략가인 Stephen Miran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의장으로 임명



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³ 의장

現 Hudson Bay Capital(헤지펀드) 투자전략가
Steven Mnuchine 前 재무부 장관(트럼프 1기) 선임 고문
美 하버드大 경제학 박사
* Martin Feldstein 교수 (레이건 경제자문처 의장) 지도

- Miran 의장이 '24.11월에 발표한 논문⁴은 트럼프 관세 추진 배경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이행 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매뉴얼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 2기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당시 Miran 의장의 제안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확인 → 향후 트럼프 관세 향방을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

1) 트럼프가 가진 문제의식과 목표

□ 트럼프, MAGA 실현 위해 기축통화 혜택은 유지, 비용 분담은 필요

○ 트럼프의 문제 의식: 미국 경제를 발목 잡는 ‘기축 통화 발행의 대가’

-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기여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을 미국이 대부분 부담하며 미국 경제와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인식(Triffin's Dilemma⁵)
 -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번영이 미국의 희생(=중산층 몰락과 국제 위상 하락)으로 가능했다” 식의 논리를 반복 주장

³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백악관의 내부(In-house) 연구 조직으로, 대통령 최측근에서 경제 정책 관련 주요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학술 연구, 통계 분석 등 자문을 제공

⁴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24.11.)

⁵ 기축통화 발행국이 직면하는 단기 국익과 중장기 글로벌 경제 이익 간의 상충을 의미

- Miran 의장은 트럼프의 문제의식을 이론적으로 설명: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핵심 준비자산으로 활용해, ①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감소하였고 ② 달러 공급의 반대급부로 수입이 증가하며 무역적자 심화를 야기
 - 풍부한 유동성으로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축통화의 이점은 이론에서나 가능하고, 실제로는 각국의 차별적 통화정책, 경제/금융 상황으로 그러한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
- 특히,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 수요가 가중, 경제 침체가 미국 기업은 총수요 감소에 더해 강달러라는 ‘이중고’에 직면
 - 침체기마다 제조업 고용은 급격히 감소했으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어도 고용은 복원되지 않음 → 美 중산층 붕괴 계기로 작용
- **트럼프의 요구: 기축통화는 미국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을 지속하되, 비용은 분담하는 것으로 ‘트럼프식 공정’을 실현**
 - 트럼프는 기축통화 위상이 미국의 핵심 자산이며, 미래 번영(American First)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지가 확고
 - “달러의 기축통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강력한 위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10.4. Fox 뉴스 인터뷰)
 - 동시에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온 기축통화의 발행·유통 비용은 혜택을 누렸던 국가들과 분담하는 것이 ‘공정’의 실현이라고 주장
 - Miran 의장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기축통화 혜택을 회수(recapture)하는 주요 수단으로, 트럼프가 신뢰하는 관세는 물론 미국이 제공했던 안보 우산의 비용 조정도 가능하다고 제안
 -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입장료’이므로, 다른 국가들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인식

2) 트럼프 관세 이행 전략

□ ‘관세 + 통화조정 정책 조합’은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살리는 국제무역체제의 재편 전략

○ 관세의 ‘다중포석’: 트럼프식 공정 실현을 위한 Key 솔루션(主치료제)이자 다른 솔루션의 이행을 촉진(보강제)하는 역할까지 수행

- 트럼프는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개선까지 가능한 관세의 확대 필요성을 장기간 인지하였고, 1기에서 ‘성공 경험’으로 본인의 신념을 확인
 - 트럼프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對中관세의 필요성을 15년 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고⁶, 이 주장은 1기 이행 경험까지 거치며 심화 발전
 - 특히, 1기 對中 무역전쟁(평균 對中 관세율 17.9%)에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 트럼프 진영에서는 ‘성공 경험’으로 공유
- 그러나, 여전히 관세가 ‘強달러’를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⁷이 큼 → 이에, Miran 의장은 통화 조정의 병행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관세를 양자 혹은 다자 통화 협정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
-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안보 비용 재조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
 - 안보 비용의 재조정은 다시 통화 조정의 유인으로 활용 가능

○ 통화 조정: ‘強달러’ 통제로 관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美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개선에 기여 가능

- 국제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거나 최소 관세에 따른 달러 상방 압력만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면, 관세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과 美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 가능
- ‘플라자 합의’와 같은 다자간 통화 합의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성장 부진을 겪고 있는 EU, 中 등 주요국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당근’과 ‘채찍’으로 관세 및 안보비용 조정 활용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⁶ 2011년 발간되어 트럼프 초기 정책 아이디어가 집대성된 저서 “Time to get tough: Make America #1 Again”에서 별도 챕터를 할애하며 대중 관세의 필요성을 기술

⁷ Miran(2024)은 ① 무역흑자에 따른 역외 달러 감소와 같은 직접적 요인 외에도 ②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 조정 ③ 무역전쟁에 따른 불안심리 ④ 관세 부과 국가의 상대적 성장률 개선 등 잠정적 요인으로 환율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Jeanne & John (2024)의 연구 결과를 재인용

증대('Mar-a-Lago Accord')

- 다만, 인위적 환율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요 가능성이 있어 연준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외국 준비자산을 장기채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조치 병행이 필요
- 다소 극단적인 방식이나, '외국 보유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제한' 혹은 '준비자산 활용에 대한 사용료 징구' 등의 강압적 방식을 통한 달러 가치 조정도 검토 가능
- 무역적자 상황 등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후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이행 가능하나 국제 사회의 반발이 불가피

【 트럼프의 문제의식과 관세 활용 방안 】



자료: POSRI 정리

3. 트럼프 관세정책 방향성 및 시사점

□ 향후 트럼프 관세 방향성: 점진적·차별적·복합적으로 추진

○ 점진적 이행: 1기에서 '충격 최소화' 효과를 확인, '점진적 이행'의 적용 방식 및 범위가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화될 것

- 1기 재임 시절, 특히 對中 무역전쟁을 치르며 채택한 점진적 이행 전략 (단계적 협상⁸ + 단계적 이행)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위는 극대화하면서, 경제 충격을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효과까지 확인
- 1기에서는 점진적 이행 전략이 단편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기에서는 트럼프 관세 전체 전선(戰線)에서 입체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지역별(캐나다/멕시코/中 → EU 예고), 품목별(철강 → 구리/목재 조사착수 → 車/반도체 예고) 관세 추진에 있어 단계적으로 범위 확대
 - 對멕시코/캐나다 관세 이행 과정에서 압박은 유지하되 협상 추이, 시장 반등 등의 상황을 반영하며 즉각적으로 대응

○ 복합적·차별적 활용: 트럼프의 복합적 의도에 따라 차별적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상호관세는 중심 체계로 활용될 것

- 통화협정, 안보비용 조정 뿐만 아니라 대미투자 유도, 미국 상품 수입 강제 등 트럼프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관계 사안에서 관세는 복합적으로 활용될 전망
- 양자 협상의 레버리지로 관세의 활용 의도가 분명한 만큼, 미국 정책의 호응 수준에 따른 국가별 관세 차별 부과는 필연적
 - 선거기간에 트럼프 경제고문(現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각국의 통화정책, 對美협정(무역, 안보 등) 수준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세를 차등 부과하고, 명확한 '승급' 조건을 제시할 것을 제안⁹
- 2.13일에 발표된 각국의 통상/비통상 규제에 대한 징벌적 상호관세가 국가간 차별적·복합적 관세 결정을 위한 전체적인 틀(Framework)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대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보조금 등) 등 통상 규제는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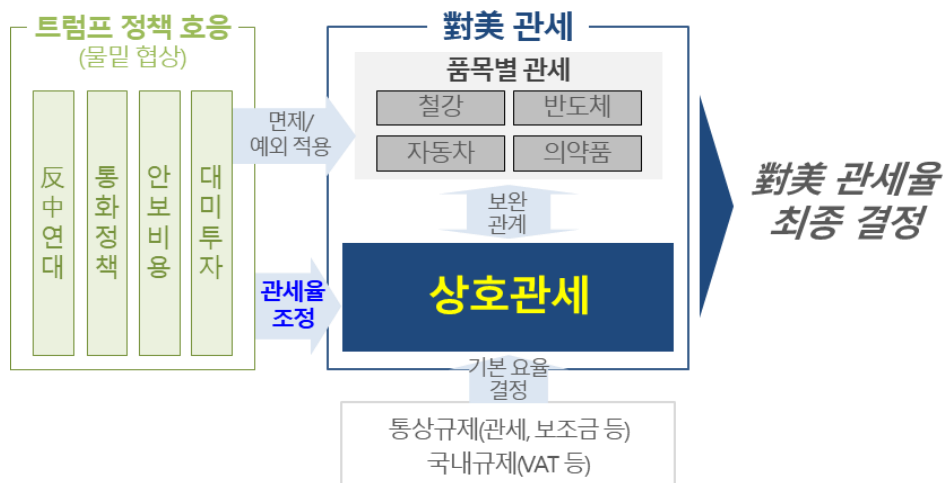
⁸ 독립 리서치 기관 BCA는 트럼프 협상 패턴을 ① 비현실적 요구 ② 강한 압박 ③ 일시적 충돌 ④ 협상 착수 ⑤ 돌발 행동 ⑥ 재협상 ⑦ 최종 합의 총 7단계로 설명

⁹ Manhattan Institute 주관 대담 내용을 Miran(2024)에서 재인용

환율, VAT¹⁰ 등 비통상 규제까지 관세율 결정에 고려하겠다는 입장

- 각국별 국내외 규제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상호관세율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광범위한 협상 진행이 예상
- 트럼프 정부는 상대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요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對美 관세율 결정 흐름 】



○ **高물가와 금융 불안이 금리 및 환율 영향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관세 효과의 상쇄가 가능 → 물가 및 금융상황이 관세 추진의 동력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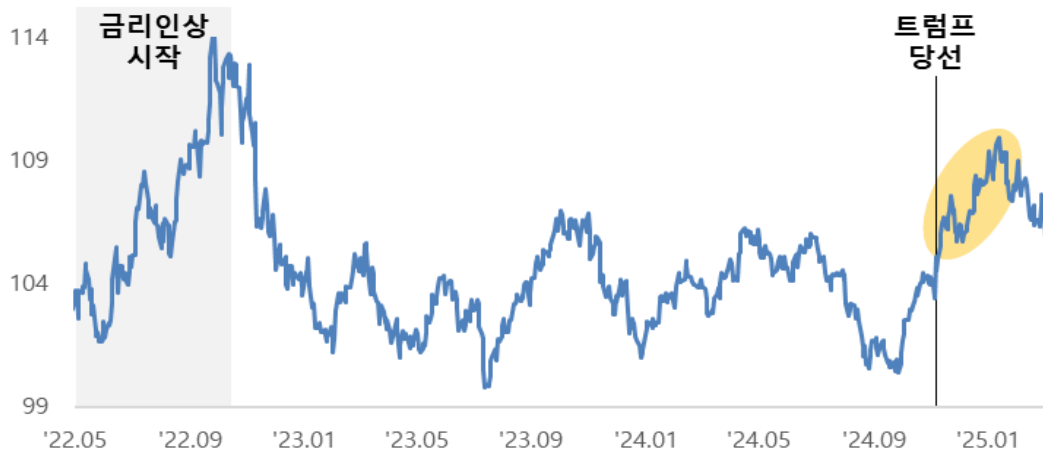
- 高인플레이션은 경기 불안심리 확대로 달러 강세 가능성을 높이고, 연준의 금리인상은 달러 강세에 압력을 가중 → 관세의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는 만큼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관리에 특히 주의할 것

- 노무라증권은 연준의 금리 인하 및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 경기 침체’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¹¹
- 취임 전, 금융시장에서 관세 우려 및 트럼프의 재정건전성 관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달러인덱스(DXY)가 2022년 하반기(금리 인상 사이클 본격화 시점) 이후 최고치에 도달, ‘強달러 경고’를 이미 경험

¹⁰ Miran의장의 논문에서 부가가치세가 자국 내 수입품에는 부과하고, 對美 수출품에는 면제함으로써 관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

¹¹ Market Watch 기사(‘25.3.5.) 재인용

【 달러 인덱스(DXY) 추이 】



자료: Bloomberg, POSRI

- 트럼프 정부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뿐만 아니라, 능동적 국채발행 정책(ATI)¹²,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 여력 보강 등 관련 통화/금융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적극 발신 중
 - Bessent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시장금리를 좌우하는 10년물 국고채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언급
- 특히, 국제 통화조정은 최근 사례가 없어 파급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이에, 인플레이션 안정화 및 재정 개선의 확실한 흐름을 先확인 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조만간 상호관세 계획과 함께 트럼프 관세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나 中, EU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예고된 대로 '25.4월 상호관세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트럼프 관세의 전체적인 '로드맵'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관련 대통령 교서(memorandum)에서는 개별 국가의 상호관세 결정에 앞서 4월부터 실태 조사를 착수한다고 명시, 일부 언론 보도에서와 같이 4월부터 상호관세가 직접 시행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아직 中, EU,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들 국가들과 트럼프 정부의 관계 설정이 다른 개별

¹² Activist Treasury Issuance: 장단기 국채 비중 조정으로 장기금리 인하 유도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미-중 협상 실패로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de-coupling이 정책 목표가 된다면 ‘反中 연대’ 수준이 상호관세를 결정의 주요 변수로 반영 가능¹³

○ 정부·산업계는 미국發 공급망 재편 압력이 야기할 다양한 파장에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활용 가치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입각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중하위 계층의 불만은 美 대선 핵심 쟁점으로 상당기간 남을 전망 → 보호무역 강화 흐름은 이제 미국의 집권 세력과 무관한 구조적 변화
 - 바이든 집권 이후에도 트럼프 관세 및 對中 견제 기조를 유지 → 정책 유형과 내용이 바뀔 수는 있어도 미국發 공급망 재편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 드라이브가 향후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예상치 못한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탈세계화’ 전망이 우세하나, 특정 국가들 간의 연대 혹은 미국 이외 국가들 간의 교역이 오히려 활발해진다면 변형된 형태의 ‘재세계화’도 가능¹⁴
 - 최근 독일의 움직임¹⁵과 같이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요국의 정부들이 경기 진작에 나선다면, 새로운 ‘투자 붐’의 도래도 가능
 - 미국이 기축통화를 통상 압력의 무기로 과도하게 활용 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국제결제 통화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음¹⁶
- 미국이 안보-통상 연계를 본격화한다면, 한국의 기존 제조 수출 모델에 다층적(관세/방위비/통화조정) 압력으로 작용 → 따라서, 중장기 대책 마련이

¹³ 2025년 하반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美-中 간 ‘제한적 협력 관계’ 형성 가능성 역시 여전히 잔존

¹⁴ Gita Gopinath IMF 수석 부총재는 2차세계 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 기간 동안 진영 내부 교역 활성화로 전체 국제무역 규모는 오히려 확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23.12월 국제경제협회 연례회의 연설)

¹⁵ 최근 독일이 미국의 ‘對유럽 전략적 포기’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 및 인프라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시작

¹⁶ 2024.10월 개최된 16번째 BRICS 정상회담에서 SWIFT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BRICS 국가 간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촉구

필수

- 산업별로 시장-공급망 관점을 구분하여 미국의 중장기적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 → 정부는 산업별 미국 활용 전략을 종합해, 미국의 다층적 압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연계할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Bloomberg, 2025.2.27. Make Them a Mar-a-Lago Accord They Can't Refuse

Donald Trump, 2011.12.5. Time to Get Tough: Making America #1 Again, Regnery Publishing

Fox Business, 2025.3.6.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calls for Trump tax cuts to be made permanent.

Gita Gopinath, 2023.12.11. Cold War II? Preserving Economic Cooperation Amid Geoeconomic Fragmentation (국제경제협회 20차 World Congress 연설문)

Jeanne, Olivier and Jeongwon Son John, 2024. "To what extent are tariffs offset by exchange r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42,

Market Watch, 2025.3.5. Is the White House trying to engineer a recession? This Wall Street pro explains the vision.

Marko Papic, 2025.2. Here, There, And Everywhere Report, BCA Research

Matt Gertken, 2025.3.12. Can Trump Avoid Recession? What About Stagflation?

Stephen Miran, 2024.11.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Hudson Bay Capital

The Interpreter, 2024.11.13. BRICS Pay as a challenge to SWIFT network

The White House, 2025.2.13.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The White House, 2018.3.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